

아특법 연내 통과 불발땨 문화전당 국가기관 지위 상실

아시아문화원, 문화전당과 통합해 문제부 산하기관 전환 등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핵심사업, 문화전당 정상화 서둘러야

국회 안전조정부위 통과 아특법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채용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비난을 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례를 들면서 ‘제2의 인국공 사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조정부위위를 통과한 아특법의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문제부 직속 기관으로 전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 운영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늘어난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 등이었다.

특히 현행법이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96명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뒤 개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또 “국가소속기관으로 전환하면 관료주의가 문화와 예술활동을 뒤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성원은 물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며, 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작자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조직 규모가 커지고 ▲국가 지원 예산이 많아지며 ▲채용 과정의 불공정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고용승계’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같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의 ‘국가기관 정규직 전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계 인사들은 “당초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 추진됐지만 이전 정부의 편협과 반대로 이원화구조라는 다소 기형적인 출발을 했다”며 “이번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은 당초 취지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문화전당 일원화 시 최소정규직 전문인력만 423~482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문화전당은 322명 가운데 48명(일반공무원 32명·임기제 전문위원 16명)이 정규직이며 공무원(무기계약직)이 274명이다. 또 아시아문화원은 총 인원 249명 가운데 정규직이 96명, 공무원(무기계약직)이 153명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년 아특법 개정안 당시 문제부에서

정규직에 관해 문화전당 100명, 아시아문화원 200명을 요구했지만 행안부에서 그 절반으로 인원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 상당수는 고용의 형태와 안정성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특별히 비치는 것에 대해 적잖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들이 지난 5년간 진행해 온 유무형의 창작자와 같은 문화자산 승계라는 관점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전당 정상화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 사업으로, 일원화 외에도 콘텐츠 승계와 지역 협력, 전당장 선임 등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문제부 소위 등을 통해 국민의힘 설득에 나섰지만 손잡을 다루는 법안 특성상 16일 안전조정부위 신청 하루만인 17일 법안을 의결했고, 22일께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현행 법에 따른 법인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며,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달리 체계적인 인력 채용 방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광주를 찾아와 무릎사과를 하는 등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에 관한 부분은 신분 보장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게 큰 원칙”이라며 “향후 문화전당과 문화원 일원화 시, 수익사업이나 콘텐츠 창작자 관련 인원은 상당수 문화원재단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38.2%…소폭 반등

리얼미터 조사…국민의힘 31.2%, 민주당 29.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 연속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38.2%로 나타났다.

11월4주 43.8%에서 12월2주 36.7%로 2주 사이 7%포인트 넘게 빠지는 급락세에서는 벗어나 소폭 반등했지만, 3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2%p), 서울(6.1%p)에서, 이념성향 및 지지정당 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7.4%p), 민주당 지지층(3.9%p), 진보층(4.7%p), 중도층(3.9%p)에서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59.1%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모름·무응답은 2.4%포인트 감소한 2.7%였다. 긍·부정평가간 차이는 20.9%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p) 밖이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그에 따른 K방역 성과 논란, 고위공직자법

최소사처법(공수처법) 등 강행 처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전임 대통령 관련 사과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국 현안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언론 노출 빈도와 메시지 강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1.2%, 더불어민주당이 29.9%로 전주보다 각각 0.4%포인트, 0.9%포인트 나란히 하락했다. 양당간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다.

국민의힘은 TK(4.6%p ↑), 인천·경기(3.8%p ↑), 60대(4.6%p ↑) 등에서 상승한 반면 PK(8.9%p ↓), 서울(4.5%p ↓), 진보층(3.5%p ↓)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의 경우 PK(3.3%p ↑), 20대(3.2%p ↑), 진보층(2.5%p ↑)에서 올랐고 광주·전라(13.8%p ↓), 40대(4.5%p ↓) 등에서는 내렸다. 이외에는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7.0%, 정의당 3.4%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취소 소송”…문 대통령과 대결 구도 양상

2개월 정직 재가…불신임 공식화

민주 사퇴 촉구, 국민의힘 날선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불신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17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으로 불복 행보에 나서면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재가하는 동시에 추미에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을 수리할 뜻을 내비치며 ‘추-윤 갈등’을 일단락하는 정치적 해결 카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17일)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

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국은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윤 총장은)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 서로라도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증상은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아마 수백 년간 두고두고 오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공수처법 개악 같은 지저분한 법 개정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도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장관”이라며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윤 총장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 “공직자로서 선을 넘는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윤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상상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전KDN은 에너지 신기술로 전력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에너지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한전KDN이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 한전KDN

발전
경제적인 전력 생산과 정확한 거래
에너지 ICT로 만드는 그린 에너지 세상

송변전
전국에 신재한 설비, 완벽한 관리 및 운영
전력공급 설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보장

배전
전기 사용을 위한 전천후 에너지
고품질의 전기 공급

에너지신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신사업
발굴을 통하여 에너지 ICT 선도기업으로 도약

경영정보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전력경영 IT
솔루션 건설, 설계 및 구축

판매
전기사용의 정확한 계량, 검침, 수납
고객과의 정직한 만남